

농축산물 수입개방압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1. 우리나라 농업의 성장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주도형의 개발전략에 의하여 지난 15년간 연평균 8.3퍼센트라는 높은 경제성장율을 달성하였다. 같은 기간동안 농업분야는 연평균 2.6퍼센트의 성장율에 그쳐 공업분야에 비하여 매우 낮은 성장율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데 1970년대의 농업분야는 상대적으로 높은 농업성장율을 실현하였다. 즉, <표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70년대 초반에는 농가소득 증가율이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의 증가율보다 높았다. 즉, 1971~1976년 동안에 실질가격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연평균 5.1퍼센트씩 증가했는데 비하여 농가소득 증가율은 7.5퍼센트나 되었다. 이와 같은 높은 농가소득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던 정부수매미가정책에 크게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같은 기간동안 정부수매미가 인상율이 연평균 25.2퍼센트로 높았고 실질가격으로도 연평균 4.8퍼센트씩 인상되었었다. 이는 지난 15년동안 정부수매미가의 실질인상율인 연평균 2.0퍼센트와 비교하면 거의 2.5배에 달하는 높은 인상율인 것이다. 그 결과 같은 기간동안 농가부채는 실질가격으로는 오히려 감소추세를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농가경제가 안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영철
(건국대 축산경영학과 교수)

이와는 대조적으로 1978-1987년의 지난 10년간 농가경제를 보면 크게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실질가격으로 정부수매미가의 인상율은 연평균 0.3퍼센트로 극히 낮았고, 농가소득 증가율도 연평균 5.3퍼센트로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증가율인 연평균 9.9퍼센트의 절반정도에 불과했다. 특히, 농업경영비의 증가율이 연평균 9.7퍼센트로 매우 높았고 농가수지의 악화로 인하여 이 기간동안 농가부채의 실질증가율이 무려 28.8퍼센트 되었다. 더구나 1970년대 후반부터 밀어닥친 농축산물 수입개방화 정책추세와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을 위한 낮은 농축산물 가격정책은 농축산업의 수지를 크게 악화시켜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

1980년대 들어와서 각종 농산물 생산의 과잉생산과 더불어 무분별한 외국 농산물의 수입은 국내 농산물가격의 폭락현상을 초래하였고 매우 취약한 농촌지역에서의 사회간접자본은 상대적으로 농가지출을 가중시켜 농가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2. 왜 미국은 한국에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을 가하는가?

최근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농산물 시

장개방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 주요한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이 자국의 막대한 무역수지적자의 누증을 농산물수출로서 일부 보전하겠다는 것과, 둘째 미국경제의 사양화현상으로 천문학적 숫자의 재정적자를 타개해 보려는 필사적인 자구노력 때문이다.

종전까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은 수입에 따른 피해 미국노동자들의 정치적압력에 의해 소극적인 수입규제조치 등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요즈음 미국은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서 상대국에 전면적인 수입개방의 강력한 요구, 직접적으로 무차별적인 무역보복조치의 위협, GATT 등 국제무역관계기관에 대한 제소 등 매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미국무역수지를 보면 1980년에 2백42억불에 지나지 않던 것이 1987년에는 이보다 무려 일곱 배나 증가한 1천7백12억불에 달하였고, 미국의 재정적자 역시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다.

특히, 급속히 누증하고 있는 미국의 무역적자 내용을 주요원인 국가별로 보면 1987년 현재 일본이 5백98억불로 가장 많고 다음 제2,3위 국가는 대만의 1백90억불과 서독의 1백63억불의 순위이고,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하여 96억불의 출초국으로서 1986년에 이어 제5위의 대미국출초국이

〈표1〉 경제성장과 농가경제

(단위 : 연평균, %)

연도	연 평 균		연 평 균 실 질 성 장 율					
	경제성장율		도시근로자 가계소득 1)	농 가 경 계 2)				
	전 경제	농림어업		농가소득	농업경영비	농가가계비	농가부채	정부수매미가
71-87	8.3	2.6	7.1	6.1	8.6	6.1	22.1	2.0
71-76	9.5	5.6	5.1	7.5	7.6	3.6	-0.1	4.8
78-87	7.4	0.9	9.9	5.3	9.7	7.0	28.8	0.3

주 : 1) 실질가격은 전도시 소비자 물가지수 사용

2) 농가경제 각 항목의 실질가격은 농가구입 가격지수 사용

자료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 주요통계 1988”.

되어 있다.

그런데 미국경제가 당면한 주요문제의 하나는 미국농업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미국농업은 세계 곡물시장의 거의 4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산업으로서 농산물은 전통적인 미국의 주요한 수출품으로 되어 왔다. 미국농업의 주요한 고민은 지금까지 매년 농산물 생산과잉에 따른 초과공급현상이다.

이와 같은 미국경제 및 미국농업의 고민을 미국은 1986년 이후 한국의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됨과 동시에 한국의 대미국출초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 추세를 근거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공산품 시장개방은 물론 농산물 시장개방과 써비스부문 및 지적소유권보호 등 전면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쇠고기를 포함한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개방요구는 최근에 한미간 통상마찰의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의 제한적인 특정품목에 대한 개방요구에서 앞으로는 농축산물 전반에 걸친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예전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농업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3. 개방농정의 대응방안

우리나라 농업은 극히 영세한 소농경영형태로서 그 주요특징을 보면 농가당 경지면적이 1정보내외로 매우 영세하며 축산업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소사육두수가 농가당 평균 1.3두에 불과한 영세한 소규모 농업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대부분 농가의 농업생산은 생계수단으로 되어 있어 일반 기업경영에서와 같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가노동의 댓가만이라도 나온다면 농가에서는 농업생산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1987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농가수는 1백87만이고 이들 농가인구는 7백77만으로서 총 인구의 18.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총 농가의 65퍼센트나 되는 1백21만 농가는 경지면적이 1정보 미만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영세소농이다.

미국측의 요구대로 우리나라 농축산물시장을 현재상태에서 완전히 개방한다면 미국과 우리나라 농업의 근본적인 차이로 우리나라 농업의 대미국 농업경쟁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업의 몰락은 자명하게 되고 우리나라 농민들의 대부분은 생계수단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농업은 지난 4반세기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빠르게 쇄퇴산업화하였지만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즉, 우리나라 농업은 국민의 기본식량을 생산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이고 총 인구의 거의 20퍼센트나 되는 800여만 농가인구에 대해서는 중요한 생계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농가의 지속적인 소득향상과 함께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민들의 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피해를 극소화시키는 정책적인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그동안 공산품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막대한 국제수지흑자의 책임을 가난한 800만 농민들의 생업인 농업부문에서 져야 한다면 지금까지 수출주도형 경제개발혜택의 극히 일부라도 농업부문에 환원시켜 주었어야 한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나라 농업에의 충격은 극단적인 소농형태하에서 일종의 유치산업상태에 놓여있는 한국농업의 몰락이라는 문제에 앞서 근복적으로는 농업이외에 다른 고용기회가 없는 200만 농가의 생계문제인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농업의 취약

점은 소농경영으로 인하여 농가소득의 저위성과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이 극히 낮은데 있다.

우리나라 농업의 국제경쟁력 향상문제는 농업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근본적으로는 조화있는 산업구조의 조정과 함께 농업생산기반의 확충을 통하여 농업생산성이 대폭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농업보호주의자로 자처하여 왔던 일본이 국내외로 농산물 수입자유화의 불가피론에 따라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주도형으로 산업구조조정과 함께 농업정책조정에서도 시장경쟁여건을 조성하고 농업생산을 고부가가치화하려는 계획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우리나라 농업의 가장 취약점은 극히 영세한 농축산업의 경영이다. 특히, 현재와 같은 농가호당 평균 1정보 내외의 극단적인 영세한 농경지로서는 기술혁신을 통하여 아무리 농업생산성을 제고시킨다고 하더라도 생산비절감이나 국제경쟁력의 향상에는 분명히 한계가 없지 않다.

따라서 장기적인 한가지 대책으로는 우리나라 농업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현 농지소유제도하에서 대규모 경영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농축산업의 협업화문제가 연구검토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와 같은 협업화는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부분적인 일부작업의 협업화에서부터 전면적인 협업화까지 다양한 형태의 협업화가 육성발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농축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혁신을 통한 일정한 개발투자를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 농축산업의 생산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농축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기술의 도입과 이에 따른 개발투자의 증가는 매우 중요하다.

기술혁신과 개발투자는 근본적으로 노동절약

적이고 자본집약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농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아울러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노동절약적인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의해서 노동생산성이 대폭적으로 제고되어야 함은 물론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가 제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농축산업기술이 갖는 특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기술개발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은 매우 제약되어 있으므로 신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대폭 확대·강화되어야 함은 물론 정부의 정책금융도 대폭 확대·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개방농정에서도 우리나라 식량자급도가 현재 41퍼센트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서 식량증산정책은 계속 강조되어도 지나치다고는 할 수 없으며,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적정가격지정책에 의하여 농축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농가소득보장대책이 당분간 계속 강구되지 않으면 안된다.

아울러 수입이 불가피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선, 수입쿼터, 수입부과금제도 등 수입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으로 수입에 의하여 생산농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피해농민들에게 직접·간접적으로 보상해 주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농·축협 등 여러가지 농업생산자단체들의 자주·자구적인 활동을 활성화시킴과 아울러 농·축산물의 가공식품분야에 농·축협등 생산자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산물 가공과정에서의 부가가치를 생산자농민들에게 귀속시켜줄 수 있는 적극적인 농가지원정책도 아울러 강구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